



황정미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1. 들어가며 : 2020년 성평등 전환을 조망하다

21세기가 시작되고도 어느 새 20년이 흘렀다. 2020이라는 숫자는 그 모양 자체로 모종의 전환점 같은 묘한 이미지를 풍긴다. 전 세계가 하나의 시공간으로 연결되고, 새로운 쟁점과 관심, 정동(affect)들이 다양한 미디어와 네트워크를 통해 시시각각 전달되면서 증폭되는 오늘날의 환경에서, 미래의 흐름을 선불리 예측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특히 성평등 정책, 젠더 이슈, 페미니즘을 둘러싼 논쟁의 역동성과 휘발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진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온라인을 통한 페미니즘 대중화, 촛불시위 참여와 페미존(페미니스트 존)의 경험, 아래로부터 불거진 미투 운동과 스쿨 미투의 확산, 온라인 커뮤니티/웹하드/텔레그램 등 플랫폼을 옮겨 다니며 준동하는 온라인 성폭력 문제, 여성 노동과 돌봄을 저평가하는 노동시장의 성차별 고착화 등 일

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새로운 쟁점들이 구래의 차별 구조와 교차하고 있다.

새롭게 불거지는 현안들이 늘어날수록 젠더 이슈도 영역별로 분화되어 세부 논의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와 동시에 “나무보다 숲”을 보면서 큰 흐름을 조망하려는 관점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 글은 향후 10년의 젠더 트렌드를 예측하는 식의 미래학적 시각과는 무관하며, 현재의 쟁점들을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기 위한 통합적 젠더 관점을 찾아가는 작은 노력의 일환일 뿐이다. 2020년 세계 여성의 날에 즈음하여 올해의 젠더 주제와 연대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몇 가지 논의들은 이를 위한 좋은 출발점으로 삼을 만하다.

■ 세계여성의 날 - 세대 평등과 집합적 개인주의

올해로 112번째인 3.8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유엔 여성기구(UN Women)가 제시한 주제는 ‘I am Generation

Equality(세대 평등): Realizing Women's Rights (여성의 권리 실현)이다. '세대'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 눈에 띈다. 유엔 여성기구는 2020년이 "성평등을 향한 전환"의 해이며, 특히 젊은 세대가 적극적인 행위자로 참여하여 참신하고 대담한 페미니스트 아젠다를 제시하고 또한 다층적인 젠더-진보적 파트너십을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페미니스트 연대활동의 주제로 몸의 자율성, 기후 정의, 성평등과 기술혁신 등 새로운 쟁점들을 포함시켰다.¹⁾

한편 세계여성의 날 조직위원회 IWD 2020은 '#EachforEqual'이라는 캠페인을 론칭하였다. "성평등 사회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성평등을 실천합시다."라는 메시지는 '집합적 개인주의(collective individualism)'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²⁾ 우리의 개별적인 행동, 대화, 행동과 마음가짐은 더 큰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각자의 위치, 관심, 문제에 따라 젠더 이슈는 상이하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각자의 자리'를 인증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편견에 맞서고 인식을 넓히고 상황을 개선하는 등 성평등 확산을 위해 노력하자는 뜻이 담겼다. IWD 2020은 캠페인 수행을 위한 각 분야별 미션을 제안하면서 디지털 산업, 스포츠 분야, 예술 분야에

서 여성의 참여와 성장, 평등한 권리를 강조하고 관련 기업의 협력을 독려한다.³⁾

2020년 세계여성의 날 캠페인에서 나타나는 국제여성운동의 아젠다는 청년 여성의 참여, 개인의 일상적 실천, 그리고 (기술변화, 환경 위기, 문화와 크리에이티브 영역 등) 새로운 도전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세대 평등, 개인, 도전과 참여가 전면으로 부각되고 있다. UN이 주도하는 국제여성운동의 출발점인 베이징 선언(1995년) 25주년을 맞이하여, 국제협력과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성평등을 확산하는 기본 전략(성주류화)을 계승하는 가운데, 변화된 환경과 새로운 쟁점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여 베이징 선언의 의미를 갱신하고 확장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 2020 한국여성대회 -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

한편, 한국여성대회의 올해 슬로건은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페미니스트 정치, 바로 지금'이다.⁴⁾ 4월 총선으로 국회 세력의 교체가 일어나는 2020년 정치 일정을 반영한 슬로건이지만, 단지 더 많은 여성이 국회의원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메시지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1) 유엔 여성은 2020년 세대평등 행동 연대의 핵심 주제로 6가지를 선정하였다. ①젠더기반 폭력 ②경제적 정의와 권리 ③몸의 자율성(bodily autonomy),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④기후 정의를 위한 페미니스트 행동 ⑤기술과 성평등을 위한 혁신 ⑥페미니스트 운동과 리더십. (<https://www.unwomen.org/-/media/headquarters/attachments/sections/get%20involved/beijing-25/generation-equality-forum/genequality-actioncoalition-leadership-en.pdf>)

2) <https://www.internationalwomensday.com/Theme>

3) IWD 2020은 각 분야에서 '#EachForEqual' 캠페인 수행을 위한 미션을 제안했다. ○디지털 산업 발전을 위해 나아가는 여성들을 돕기, ○스포츠 분야에서 임금, 처우 등에서 평등이 실천될 때마다 기념하기, ○출신 배경과 관계없이 평등하고 포용적인 직장 만들기, ○여성의 학습과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여성이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를 쉽게 얻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예술 분야에서의 여성 업적 격려하기 등이다. 이미 파트너로 HCL테크놀로지, 아마존, AVON, 메드트로닉, 맥도날드, 슈나이더 일렉트로닉을 포함한 24개 기업이 지지·협력 의사를 밝혔다. (여성신문 2020. 2. 21일자.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314>)

4)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http://women21.or.kr/notice/15778>

‘성평등 없는 민주주의’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강한 문제의식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동안 성평등 문제가 공론장에 제기되고 제도적 개혁이 가시화되는 일련의 과정과 경험이 그 배경에 있다.

한국에서 성평등이 공론장에서 논의되고 성평등 정책이 제도화되는 과정은 1980년대 이후 민주화가 이루어낸 성과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1987년 이후 확장된 시민사회 공간에서 여성운동은 고용평등, 성폭력과 가정폭력, 여성인권과 성차별을 다루는 법률 제정을 주도하였으며, 이러한 기반 위에서 2001년 여성부가 출범하였다. 한국적 ‘국가 페미니즘’ 전략이라고 부를 만한 일련의 성평등 개혁의 제도적 성공은 그러나 새로운 난제와 딜레마들을 불러왔다(황정미, 2017; 서두원, 2012).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성평등을 추진하는 정책 거버넌스의 불안정성이다. 성평등 문제가 공론장으로 제기되어 효과적인 정책 방안을 산출하기에 이르는 메커니즘이 늘상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대개 시민사회에서 강한 이슈가 제기되고 (예를 들면, 미투 운동의 연속적 폭로, 청와대 청원, 해화동시위 등으로) 일정하게 정치적 공간이 확대될 때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들이 논의되고 실행에 옮겨진다. 성평등과 여성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 뚜렷하게 조직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책 마련을 담당하는 것은 주로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된다. 그런데 시민사회에서 분출된 정치적 요구들을 정부기구, 즉 관료제의 프로그램 안에서 해결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조직과 예산 면에서 열세에 있는 여성가족부는 타 부처와 중첩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⁵⁾ 이러한 거버넌스의 불안정성은 성평등 정책 담당부서의 평판과 사회적 영향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2016년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부터 2018년 미투운동 기간 동안 성폭력과 여성가족부를 다루는 124개의 기사를 분석한 연구(정사강·홍지아, 2019)에 따르면, 특히 보수언론 기사들은 여성가족부를 이기적이거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주체, 무능력한 주체, 존재감이 없는 주체로 재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보도는 여가부가 위치한 행정 조직 체계의 특성이나 국가 페미니즘의 한계 등 활동을 제한하는 구조적 원인을 살피는 대신 결과로서의 부정적인 업무 평가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처럼 편향된 여성가족부의 젠더정치적 재현은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성차에 따른 젠더위계질서의 재생산에 기여한다.

두 번째로 주목할 맥락은, 성평등 제도 개혁이 한국사회의 경제구조나 노동시장에 고착되어 있는 성차별과 성별 분리를 해소하는데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여성가족부 등 여성정책 전담체계가 만들어진 시기는 IMF 경제위기 직후이며, 여성에 대한 우선해고와 비정규직화, 실업과 빈곤 위험 등 차별적 구조가 강화되는 시기와 겹친다. 그 이후에도 성평등 제도개혁은 경제위기 시대 한국 여성들이 경험한 사회적 배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으며, 고용차별 의제는 점차 축소되었다(황정미, 2017: 30~31).

세 번째로는, 페미니즘의 대중화와 10대 20대 청년 여성들의 적극적인 온라인 페미니즘 활동은 젠더 의제에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였다는 점이다. 젠더 의

5) 이러한 거버넌스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부처를 총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평등 위원회의 설치를 여성운동단체와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최근 고용노동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국방부 등 유관 부서에 여성정책 담당관이 신설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하겠다.

제를 제기하고 확산하는 기존의 네트워크가 여성운동단체와 전문가 및 학자, 일부 정치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온라인 페미니즘 운동은 불특정 다수의 SNS와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과거에 침묵되었던 새로운 의제들을 유통시키며 증폭시켰다. 젠더 아젠다의 내용 또한 개인의 일상적 경험에서 나오는 분노와 저항, 온라인을 통한 인증과 공감을 통해 특정 문제나 대상에 대한 분노나 처벌요구가 강조되는 등의 특징이 나타난다. 디지털 네이티브 청년 여성들이 제기하는 젠더 이슈들은 기존의 성평등 정책 언어와는 결이 다른 새로운 감수성과 문제 영역을 다루고 있다. 여성 청년들의 목소리는 기존의 성평등 정책 우선순위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기존의 제도적 틀 안에서 점진적 개혁으로 추진되었던 성평등 정책의 한계를 비판한다.

바로 지금 성평등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2020 한국여성대회의 선언은 이와 같은 기존 성평등 정책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 전환을 위한 페미니스트 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 EU의 성평등 전략 : 성평등 유럽 2020-2025

유럽연합은 성평등 유럽(A gender-equal Europe)을 향한 5년의 계획을 정리한 EU의 전략을 발표하였다(A Union of Equality: Gender Equality Strategy 2020-2025/ March 05, 2020). 이 전략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이 성평등 전략은 2020-2025년 유럽 위원회의 성평

등을 위한 노력의 틀을 만들고 정책 목표와 핵심 활동들을 제시한다. 목적은 성평등한 유럽을 성취하는 것, 젠더 기반 폭력, 성차별, 그리고 (과거에 형성된) 여성과 남성 간 구조적 불평등이 없는 유럽, 여성과 남성, 소년과 소녀, 그리고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평등한 유럽을 성취하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이 선택한 삶을 추구할 자유, 성공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 유럽 사회에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평등을 추구한다.”⁶⁾

성평등 유럽(2020~2025) 계획에서 몇 가지 특징을 읽을 수 있다. 첫째, 유럽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들, 즉 녹색 전환(환경위기)과 디지털 전환(기술 변화),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전체의 잠재력을 최대화해야 하며, 성평등을 그러한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실현해 주는 것이라고 본다. 사회 공동체의 잠재력을 확대하고 실현하기 위해 성평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성평등은 개인의 자유와 성공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그런데 개인의 역량과 성공에 대한 강조는 언뜻 자유권적 표현으로 보이지만, 개인들의 다양한 위치와 차이, 즉 ‘교차성(intersectionalities)’ 강조로 귀결된다. 즉 사회권의 실현을 강조하는 시각이 전제되어 있다.

여기에서 앞서 살펴본 UN 여성과 IWD 2020의 캠페인과 유사한 흐름들을 읽을 수 있다. 공통의 배경은 1995년 베이징 선언의 행동계획(action plan)을 계승하려는 노력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우선 성주류화 전략을 기반으로 성평등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개별 정부들의 노력과 책임을 강조하며, 국가와 시민사회 행위자들 간의 파트너십, 국경을 넘는 페미니스트의 연대를 확장한

6) 2020년 세계여성의 날 (3. 8)에 임박하여 발표된 유럽의 성평등 전략 문서. https://ec.europa.eu/info/policies/justice-and-fundamental-rights/gender-equality/gender-equality-strategy_en(2020. 3. 10. 다운로드)

다. 다른 한편, 새롭게 불거지는 젠더 이슈들을 날카롭게 조명하고,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인 문제해결 방안 및 협력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구체적인 정책 과제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성평등 유럽(2020~2025)’은 세부 주제로 1) 폭력과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2) 성평등 경제에서 성공하다, 3) 사회 전체에서 평등하게 주도하다(리더십), 4) EU 정책에서 성주류화와 교차성 시각, 5) EU에서 성평등을 진보시킬 재원 확보 행동, 6) 전 세계에서 젠더 평등과 여성 세력화에 기여 등 6가지를 제시한다. 여기에서는 1), 2), 4) 주제를 좀 더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 폭력과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유럽연합의 성평등 전략에서 가장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한 것이 젠더기반 폭력 문제이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젠더 이슈를 다룰 때 젠더폭력 문제가 가장 우선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젠더 기반 폭력을 다루는 관점과 강조점에서 몇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다. 첫째,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항하고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데올로기에 맞서는 노력들은 유럽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폭력적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토양이 되는 극단적 이데올로기를 방지하는데 기여한다고 본다. 젠더 폭력을 정의롭게 해결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은 한국 사회에서 젠더기반 폭력 문제를 이른바 ‘젠더 갈등’의 프레임으로 보는 일부의 시각, 즉 ‘성인지적 관점’의 법 개정이나 새로운 판례들은 결국 (여성) 피해자에게 유리한 반면 (남성)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사법적 과정에서 갈등이 더 증폭될 것이라는 시각과 대척점을 이룬다.

둘째, 폭력과 더불어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강조한다. 폭력은 신체적 위해일 뿐 아니라 여성의 존엄성과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며, 피해자에 대한 낙인과 사회적 배제로 이어진다. 젠더기반 폭력은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구분 짓고 대상화하는 고정관념들과 함께 작용한다. ‘성평등한 유럽(2020~2025)’ 전략에서는 젠더 고정관념이 임금격차를 포함한 사회 모든 영역의 불평등의 뿌리가 되는 원인이라고 본다. 최근 경제혁신의 아이콘으로 등장한 인공지능,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머신 러닝 등 새로운 영역에서도 젠더 편견이 강화되거나 기존의 위험을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다. 마찬가지로 미디어, 문화 영역, 오디오-시각 산업 등에서도 왜곡된 여성 이미지나 고정관념의 재현을 차단하고 여성의 시각을 담아내기 위한 성평등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성평등 경제에서 성공하다

여성의 노동참여는 가장 오래된 젠더 이슈이지만,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하는 여성의 위치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다. 경제발전을 경험한 거의 모든 국가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동을 겪고 있으며, 부양비 증가와 노동력 감소라는 맥락에서 여성의 노동참여는 경제 전반에 강하고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여성들이 스스로 자기 삶을 형성하고, 공적 생활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며, 무엇보다 경제적 독립성을 누리기 위해 노동 참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유럽에서 여성의 고용률은 과거 어느 때 보다 가

장 높아졌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또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장벽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젠더와 이외 다른 취약성/주변성이 중첩되는 소수자들이 불안정하고 차별적인 일자리에서 빈곤과 배제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특히 복지국가가 성숙된 유럽의 맥락에서 임금격차는 곧 연금 격차로 이어진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여성의 노동생애에서 누적되는 젠더 격차와 임금격차는 결국 연금 격차로 이어지며, 여성 노인의 빈곤 위험은 남성보다 높다.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임금 투명성(pay transparency)을 높일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연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돌봄 때문에 발생한 경력단절에 연금 크레딧을 제공하는 등, 돌봄을 인정하는 제도적 개선이 모색되어야 한다. 젠더에 따른 돌봄 격차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직업적 성공과 가정에서 돌봄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여성에게 특히 큰 도전이다. 질 좋고 접근성이 높은 공식적 돌봄 서비스의 확대야말로 노동시장의 젠더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가장 핵심적 요인이다.

유럽 연합은 또한 다양하고 새로운 경제 영역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강조한다. 여성이 투자자, 기업가로서 활동할 기회도 더 넓게 개방되어야 한다. 유럽에서 여성의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은 남성보다 높지만, ICT 기업 취업자나 과학기술 분야(STEM) 졸업자 중 여성 비율은 남성보다 낮은 점도 지적한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전환의 과정에서 여성의 위치와 참여의 포괄적 변화와 새로운 파장들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women in digital').

■ EU 정책에서 성주류화와 교차성 관점

유럽사회가 오늘날 직면한 중요한 도전들, 즉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인구 변화 에는 모두 젠더 차원이 포함되어 있다. 유럽 연합과 각국 정부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 수단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핵심적 정책영역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기후 변화나 에너지 문제에 관한 정책 결정이 여성에게 차별화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의 기존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기후 난민이 될 가능성은 적은 반면, 에너지 빈곤은 여성에게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한다는 사실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운송수단(emission-free transport)을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편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EU는 여성 건강 문제,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차별이 젠더와 상호교차되는 문제들 또한 주목하고 있다.

향후 5년을 조망하는 유럽연합의 성평등 전략에 대한 고찰을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성평등 전략의 큰 열개는 앞서 살펴본 세계 여성의 날 주제와 유사한 점이 많다. 1990년대 국제여성운동의 성과물이라 할 수 있는 베이징 선언의 기본틀(성평등, 성주류화 등 기본 개념들)을 승계하면서, 여기에 새로운 환경변화(환경위기, 기술변화, 복지제도 재편 등)와 밀레니얼 세대의 관심사들을 투영하는 방식으로 젠더 이슈를 점진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한국의 젠더 관련 정책들도 성주류화 전략 등 베이징 선언의 언어들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데, 여성가족부 출범 이후 거의 2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새로운 세대의 경험, 사회적 환경변화에 부응

하는 젠더 의제의 확장에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의 성평등 전략에 폭력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자유, 사회를 주도하는 참여, 경제적 성공 등 여성 개개인의 성장과 독립을 강조하는 언어들이 전면 배치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둘째, 유럽연합의 성평등 전략은, 사회공동체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다양한 사람들의 잠재력을 최대화해야 하며, 환경위기와 기술전환 등 새로운 사회문제에는 젠더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필연적으로 교차성의 시각을 전제하고 있다. 젠더 이슈는 더 이상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문제로 단순하게 재현될 수 없으며, 사회구성원들을 구분하고 균열시키는 다층적 프레임과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환경 변화를 모두 아우르는 전략이 요구된다. 교차성에 대응하는 젠더 정책은 가령 노동, 교육, 환경, 과학기술 등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정책 대응을 필요로 한다. 교차성 의제를 발굴하고 필요한 대응방안을 만들어내는 거버넌스 내지 정책 추진체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도 새로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 남아있는 과제들

젠더 이슈, 성평등 정책의 미래 비전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인구구조의 변화(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와 계층격차 심화, 가족다양성의 확대와 1인가구 증가 등의 거시적 요인들이다.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에는 4대 전략 22대 과제 중 하나로 젠더평등이 포함되어 있다. “개인화와 급속한 기술변화

속에서도 성평등 사회를 지속’하는 것이 정책 과제로 설정되어 있다. 향후 2045년까지 추진할 핵심 정책과제는 대안적 가족제도와 사회적 지원 체계 마련, ‘일하고 돌보며 참여하는 시민’ 모델로의 전환, 기술활용에서 젠더 격차 완화와 혁신역량에 차별 없는 접근, 성평등 정책의 총괄 및 조정기능 강화, 성주류화 추진체계 확산 등이 제시되었다 (이태수, 2019).

미래비전 2045에서 외부적 요인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성평등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면, 여기에서는 성평등 의제의 흐름에 대한 내재적 진단 및 성찰, 성평등 정책의 참여자이자 수혜자인 여성(시민)들의 암묵적/ 명시적 요구와 그 의미, 성평등 이슈의 지향성과 장기적인 방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언급하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 성주류화와 청년 페미니스트의 파트너십?

이제까지 간략하게 살펴본 유엔 여성의 아젠다와 유럽 연합의 성평등 전략에서, 유사한 흐름을 읽을 수 있다. 한편으로 1995년 베이징 여성대회에서 제시한 성평등 정책의 기본틀을 승계하면서, 다른 한편 청년 세대의 새로운 경험과 시각으로 새로운 아젠다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 2020년 이후의 성평등 전략의 기본 접근틀이다. 한국에서도 촛불시위 이후 분출된 청년 여성들의 목소리, 성폭력과 성희롱, 여성혐오에 대한 분노를 여성정책의 틀 안으로 포용하려는 노력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달리 표현하자면, 성주류화 정책과 대중화된 페미니즘의 만남, 기존 성평등 정책과 더 많은 성평등을 원하는 청년 세대 간의 파트너십은 다가올 5년, 혹은 10년 동안 핵심적 과제로 논의될 것이다. 대략

2011년 이후부터 활성화된 온라인 페미니즘,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분출된 페미니스트 대중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여성들은, 향후 10년 동안 사회에 진출하고 노동자의 삶을 시작하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청년 세대의 일상에서 제기되는 요구와 경험을 반영하여 기존 성평등 정책의 우선순위가 재구성되어야 하며, 온라인 공간에서 표출된 역동적 요구와 그동안 침묵되었던 분노와 저항의 목소리들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사회적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유럽 연합에서 강조하는 교차성의 시각에서 다양한 여성들의 필요, 계층과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달리 작용하는 차별적 구조들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흥미롭게도 유엔 여성과 유럽 연합의 성평등 전략에서 여성 개개인의 목소리, 경제적 독립과 성공, 자기 스스로 주도하는 삶, 사회 전반에 주도적인 참여가 강조된다. 이러한 접근은 한국 여성정책의 오래된 관성, 즉 여성을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인지하고, 국가발전의 하위 과제로 여성발전을 다루어온 시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여성을 '개인', 즉 독자적 이해관계와 입장, 선택을 지닌 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랜 가부장제 하에서 문화적 터부처럼 여겨진 것도 사실이다. 최근 부상한 '젠더 갈등' 프레임은 이러한 문화적 터부에 기대고 있다. 경제적 독립, 사회적 성공, 사법적 정의를 요구하는 여성은 '이기적' 존재이며 남성의 파이를 빼앗는다고 비난하는 '젠더 갈등' 프레임은 애초에 여성의 시민권을 부인하고 있다.

■ 사회공동체의 핵심 전략에 젠더 관점 통합

사회 공동체가 직면해 있는 거대한 도전, 즉 환경 위기, 인구구조 변환, 기술 혁신,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위기 등에 대해서도 젠더 관점의 성찰이 필요하다. 사회 내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성별, 연령, 인종/민족, 지역, 문화 등 사회적 균열이 확산되는 사회에서 젠더 의제도 특정 집단 중심의 세부 과제로 분화되어 논의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성주류화 전략의 가장 큰 장점은 사회 전체의 핵심 전략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려는 담대한 접근법에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유럽 연합의 성평등 전략에서 반성폭력 운동의 가치는 여성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넘어서는 더 큰 담론, 즉 극단주의와 혐오를 극복하고 평화를 확산하는 노력으로 의미화된다. 한국에서도 미투 운동, 온라인 성폭력과 동영상 유출 문제 등 성폭력 처벌과 예방을 위해 보다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물론 기존의 잘못된 관행, 침묵의 카르텔을 해체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은 불가피한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에 대한 분노가 여성의 몸에 배타적으로 근거한 순수한 정체성, 나와 다른 집단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난민을 배제하고 성소수자의 권리를 부인한다면 평화에 역행하는 극단주의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세계 곳곳,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극단주의 근본주의, 자민족 중심주의,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상대방을 혐오하는 극단적 정치가 횡행하고 있다. 안티 페미니즘과 차별화된 페미니즘의 가치, 성평등 이슈의 지향점에 대한 지속적 성찰이 중요해지는 이유다.

■ 일상의 정치 + 제도 개혁과 재분배

온라인 공간을 통한 페미니즘의 대중화는 젠더 이슈의 형성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그 영향력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페미니즘은 개인의 일상적 문제를 발화하고 즉시적 소통을 통한 확산력이 폭발적이며, 해시태그 등을 통해 찬성, 추천, 퍼 나르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의제설정이 이루어진다(김은주, 2019). 온라인 공간은 사적이고 일상적인 문제, 그래서 침묵했던 고민거리를 의제화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 #미투 운동은 한국, 미국 뿐 아니라 성평등 정책이 가장 잘 제도화 되어 있다는 스웨덴에서도 퍼져나갔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라는 1970년대 급진적 페미니즘의 모토처럼, 일상의 문제를 정치로 증폭시키는 온라인 페미니즘의 대중성은 주목할 만하다.

개인의 일상, 각자 자리에서의 실천과 같은 표현들은 밀레니얼 세대의 경험과도 연결된다. 미국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젠더 고정관념을 불편하게 여기며 “젠더를 넘어선 유포피아”를 원한다. 실제로 이들은 젠더 고정관념을 개

인적으로 거부하는 실천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젠더 구조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⁷⁾ 온라인에서 퍼져나가는 페미니스트 대중운동, 한 예로 최근 한국에서 확산된 탈코르셋 운동은 특정 조직에 속하지 않고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동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⁸⁾

향후 젠더 이슈가 형성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발화와 온라인 페미니즘의 비중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상적 문제를 정치화하는데 효율적인 온라인 페미니즘은 역으로 ‘정치적인 것을 개인적으로’ 축소시킬 우려도 없지 않다. 온라인 담론들이 간과할 수 있는 제도적 젠더 구조의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중요한 쟁점들이 제기될 필요가 있다.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들어가고 독자적인 경력을 추구하게 될 것이므로, 임금 격차를 포함한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가 지속된다면 추후 복지과 연금에서의 격차로 이어질 우려는 더욱 커질 것이다. 노동시장의 성차별, 돌봄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불이익을 보전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복지제도를 개선하는 제도적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7) Risman, Barbara J. 2018. *Where the Millennials Will Take Us : A New Generation Wrestles with the Gender Structure*,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8) 확장하지 않은 얼굴, 짧은 머리, 부러진 립스틱 사진을 올려 탈코르셋 실천을 인증하고 또다른 여성들에게 용기를 줌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생각한다. 탈코르셋 운동은 한국에서 성공한 대중운동이나 일상의 정치를 표현하고 있지만, 운동의 지속성과 페미니즘 의제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향후 고민이 필요하다(김애라, 2019).

• 참고문헌 •

- European Commission, “A Union of Equality: Gender Equality Strategy 2020–2025/ March 05, 2020”.
- Risman, Barbara J. 2018, *Where the Millennials Will Take Us : A New Generation Wrestles with the Gender Structure*,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김애라, 2019, “탈코르셋, 젠트리피케이션: 디지털경제의 대중화된 페미니즘”, 〈한국여성학〉 35권 3호, 43~78.
- 김은주, 2019, “제4물결로서 온라인 페미니즘 : 동시대 페미니즘의 정치와 기술”, 〈한국여성철학〉 31권. 1~32.
- 서두원, 2012, “젠더 제도화의 결과와 한국 여성운동의 동학”. 〈아세아연구〉 55권 1호, 162~192.
- 이태수, 2019, “혁신적 포용국가 4대전략 22대 실천과제 - 사회부문”.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 비전 2015〉 자료집 (2019. 12. 12).
- 정사강·홍지아, 2019, “국가 페미니즘, 여성가족부, 여성혐오”, 〈미디어, 젠더 & 문화〉 34권 1호, 209~253. 미디어, 젠더 & 문화(34권 1호)
- 황정미, 2017, “젠더 관점에서 본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공공 페미니즘과 정체성 정치”, 〈경제와 사회〉 114호, 18~51.